

북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수출 통제

정부 ‘맞춤형 감시대상 리스트’ 작성
국제사회 최초 77개 품목 선제 대응
개인 4명·기관 6곳 독자제재 추가도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함이다.

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작성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

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베이징속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등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기자



한한 하천... 물을 깨끗하게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등 참석자들이 하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단순 초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찾으면 ‘페널티’

다른 병원 보내거나 더 많은 비용 청구
응급진료체계 환자 경증 따라 재정비

앞으로는 단순 초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

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현장·이송, 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있으나 그 역할이 모호한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각각 중증, 중등증, 경증 진료 기능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시설·인력·장비 중심인 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수술, 시술, 최종치 역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산업계 2030년 탄소 배출량 11.4% 줄인다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
부문별 목표 제시... 원전 발전은 확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 톤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톤에서 -11.2톤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은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튀르키예 이재민 위한 ‘한국마을’ 설립 추진

월드투게더, 하타이주 지역에 거주공간
4인 가족용 컨테이너 최대 200동 지원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피 흘렸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한국마을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월드투게더는 21일 “튀-한문화교류협회, 튀르키예 한인회총연합회와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하타이주 지역 이재민에게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이재민들의 거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튀-한문화교류협회에 따르면 붕괴된 집을 다시 짓고, 입주하려면 최대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튀르키예 내무부 재난긴급상황대응실(AFAD)을 통해 땅과 기반 시설을 지원받으면, 여기에 4인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대 200동의 주택을 지어 하타이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월드투게더는 국내 공익 기부 플랫폼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한국마을 설립을 위한 재원을 모으고 있다. 자체 후원 캠페인도 펼쳐 사업을 널리 알려 많은 기업과 단체가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월드투게더는 설명했다.

김용우(전 육군참모총장) 월드투게더 회장은 “강진에 이어 홍수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한국마을’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